전주매일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음 5월 1일) 제279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매일 INDEX

3면

'내 삶을 지켜주는나라' 신복지 전북포럼 출범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그린뉴딜·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퍼즐 완성

도, '2차전지 개발 연구과제' 과기부 공모 선정

전기·수소차에 이어 2차전지 사업까지 추진

전북도가 전기·수소차 개발에 이어 2차전지 개발 관련, 120억원대 전국 공모 과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R&D 혁신밸리 육성사업' 전국 공모에 신청한 120억원 규모의 2차전지 개발 연구과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전북은 전기·수소차 개발에 이어 2차전지 개발사업까지 추진하게 돼 전북형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의 산업생태계 퍼즐을 완성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전북에서 제출한 과제는 '스마트 수송 인프라 기반 고성능 전지 소재부품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이다.

특히, 도가 이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드론에 탑재될 '초경량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개발하고, 250w급 '탄소섬유 기반 연료전지 발전 모듈' 등도 개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이 연구개발을 통해 2023년까지 신규고용 112명과 수혜기업의 7% 이상 매출 상승은 물론, 농생명과 융복합 소재·부품산업을 특화한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명품특구로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이미 지난 4월 연구개발특구의 전국 최우수 성과평가로 받게 되는 성과 인센티브 21억원과 이번 과제 공모 선정으로 123억원 규모의 R&D 과제비가 지원됨으로서 전북도의 연구개발 위상은 물론, 도내 기업들의 성장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월 준공된 '전북테크비즈센터'가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시설과 내용 측면에서 전국 최고의 명품특구로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2차전지 관련 고성능 전지 소재·부품은 전북 연구특구와 군산 강소특구의 공통 특화 분야로, 특구 지정으로 인해 도내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공모 과제는 지방단위에서 추진하는 단일 연구과제가 100억원이 넘는 상당히 이례적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특히, 광역시를 기반으로 인구와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타 특구와 경쟁을 통해 전국에서 총 2개 과제만을 선정하는데, 그중 1개 과제가 전북이 선정돼 전북도민으로서 자긍심이 더욱 크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사업 추진 밑그림 단계에서부터 전북도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과기부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의 상향식(Bottom-up) 방법으로 진행돼 전형적인 전북도 지역주도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북 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뉴파워플라즈마, 비나텍 등 총 12개 기술혁신기관과 기업들이 공동 참여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평소 전북도가 역동적으로 추진해 온 과학기술 정책의 역량과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전북 테크비즈센터 준공과 더불어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강소특구가 도내산업 생태계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사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2050 탄소중립' EU 주요 도시와 공유

김승수 전주시장, 기초지방정부 국제 웨비나서

에너지전환 · 천만그루 정원도시 등 주요과제 소개

전주시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정원도시 인프라 구축 등 '2050 탄소중립' 계획을 프랑스 파리를 포함한 EU 도시 등과 공유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9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봄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국제 웨비나'에 참석해 생태전환도시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의 책임과 전환'이라는 주제로 8일과 9일 이틀간 열린 이번 국제 웨비나에는 노르웨이 오슬로, 프랑스 파리 등 EU 도시들과 광명시, 고양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국내 지자체들이 참여해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했다.

김 시장은 이날 ▲에너지전환도시 ▲생태교통도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지역재생 및 그린리모델링 ▲지역경제순환 ▲생물다양성 및 동물복지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위한 6대 전략과 주요과제를 소개했다.

에너지전환도시 분야의 경우 전주시민햇빛발전소 사업이 소개됐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나서 배수지나 체육센터, 학교 등 다양한 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사진 왼쪽)은 9일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봄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지방정부 국제 웨비나'에 참석해 생태전환도시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전주시청 제공〉

생태교통도시 분야에서는 전주역앞 대로를 사람 중심의 첫마중길로 조성한 사례와 함께 수소 시내버스, 한옥마을 관광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사례들이 공유됐다.

꽃심 지방정원, 미세먼지 저감숲, 도심 바람길 숲 등 천만그루 정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화와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소개됐다.

지역경제순환 분야에서는 최근 서노송예술촌에 문을 연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이 소개됐다. 자원순환 대표 플랫폼이 될 이곳은 폐제품을 수거해 가공·생산·판매까지 새활용 산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밖에 삼천의 임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서 살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때문에 멀리 떠나야 했던 멸종위기 동물 맹꽁이가 보금자리로 돌아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한 삼천 생태학습장 조성 사례도 발표됐다.

김 시장은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생태교통협의회,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전주원도심교육공동체, 도시계획협의회 등 생태도시 민관협력기구와 함께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올 연말까지 전주시 2050 탄소중립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정 전반을 과감하게 탄소중립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성과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우리 삶 곳곳에 걸쳐있는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 시 기후위기 영향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탄소중립 도시 실현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숨을 쉬게 만드는 일인 만큼 시민들과 함께 후퇴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프랑스 파리의 Dan Lert 부시장은 시민들이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안에 상점과 학교, 문화·의료·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15분 도시' 계획과 2030 기후목표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또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기후·에너지 정책을 소개했다. /김윤상 기자

도 청년정책 선호도 1위

'전북형 청년수당'

도, 정책 수립 자료 활용키로

도내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청년정책은 '전북형 청년수당'(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전북청년허브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진행한 '청년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북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2개 대표사업 중 청년들이 가장 공감하며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향후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됐으며, 도내 청년 1,399명(남 546, 여 853)이 참여한 가운데, 20대가 44%, 30대가 56%의 참여율을 보였다.

조사 결과 1순위 선호정책은 일하는 청년의 지역 안착을 위해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전북형 청년수당'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청년을 추가 채용하는 기업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이, 3순위는 청년친화기업을 발굴해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친화 일자리 매칭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형 청년수당'은 광역 최초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의 소득 보전과 함께 청년의 삶을 더욱 활력있게 지원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어, 4순위와 5순위는 '대학생 직무인턴'과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정책으로, 도내 청년들에게 전공과 연계한 다양한 직무 체험을 제공하고,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온·오프라인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와 함께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청년정책포럼단, 시·군, 수행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훈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며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청년들의 현장을 살피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